- 2019년 4월 민주주의 서울 -

<시민토론>의제선정 기획단 회의록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 '19. 4. 19.(금) 15:00 ~ 18:00

□ 장　　소 : 본청 3층 소회의실-1

□ 참 석 자 : 14명

□ 시민토론 대상 의제 검토 및 기획

Ⅱ 회 의 진 행

□ 민주주의 서울 및 시민토론 소개

□ 2019년 〈시민토론〉 의제 선정 절차 및 기준 소개

□ 2018년 〈시민토론〉 의제 선정 및 사례 소개

□ 2019년 4월 〈시민토론〉 대상 의제 소개

□ 2019년 4월 〈시민토론〉 대상 의제 검토 및 기획

○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 관련 제안

○ 탄천물재생센터 태양광 설치

○ 강일동 9호선 연장 확정 고시 요청

○ 은평자원순환센터 백지화와 차차를 통한 시민 이동환경 수준 개선 및 공유 경제 활성화

Ⅱ 회 의 결 과

□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회의 요약〉

○ 길고양이 관련하여 동물권을 의제로 공론화 하는 것에 동의

○ 다만, 공론화할 구체적 주제와 방법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었음

○ 그 결과

① 도시재생지역에서의 동물권 보호(실험형)

② 재개발 지역에서의 동물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대책 마련(찬반형)

○ 이후,'19. 4. 24. 민주주의 서울〈시민토론〉의제선정 선정단에서 2가지 주제를 숙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 의제 결정 예정

○ A: 도시재생지역의 동물과의 공존, 생명보호에 대한 토론이 필요다는데 공감. 실험장 방법으로 해 보길 제안함. 동물공존도시 기본계획이 시민들에게 와 닿는 사례가 없는데, 재건축 지역 길고양이가 좋은 사례가 될 것. 재생지역 몇 곳을 선정해서 동물권, 이주권 등 구체적 사례를 만들어보면 좋겠음.

○ B: 도시개발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동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조례 개정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서, 시민들과 같이 워크숍 열어 개정안 함께 만들어 가는 방법이 좋겠음.

○ C: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법적 제한 때문에 동물권 보호가 실현되기 어려웠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동물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토론형으로 진행,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방법이라고 봄. 재건축 지역 논의로 한정시키면,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논의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동물의 지위, 동물권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꾸준히 홍보했으

면 함.

○ E: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토론은 실효성이 없다고 봄. 시민 제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그런데 공론화를 통해서 시민들이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문제를 제기 해주신 시민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결론으로 보임. 구체적인 성과를 바라고 제안해 주신 것 같음. 의제검토 과정에서 중점을 둬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함.

○ G: 의제에 대한 개인의 입장보다 서울시 관점에서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하다고 봄. 토론 형식에 맞게 의제도 재조직화해야 하고, 세부적인 것보다 큰 방향성을 갖고 공론장을 열면 좋겠음. 동물권이 쟁점이 되게 하여, 조례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얽혀 있다면 함께 논의하기를 바람. 시민토론으로 진행하면 좋겠고,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면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할 것임.

○ I: 공무원 입장에서는 실행 가능성이 제일 중요함. 부분적으로라도 이행 가능한 범위에서 공론화가 되고 그 성과를 민주주의 서울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음.

○ K: 동물권 이슈가 민주주의 서울 방향과 어울릴 만큼 중요한 의제라는 것을 알리려면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함. 이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서 동물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도 좋다는 사례를 남겨야 할 것. 실험장 방향에 동의함.

○ G: 시민의 입장에서 법, 조례, 환경영향평가 등은 구분이 어려움. 이런 구분을 하지 말고 동물보호 관련 제도나 정책 도입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하면 좋겠음.

○ H: 공론화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임.

○ E: 실험장이라는 용어를 수정했으면 좋겠음.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실험을 한다는 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음.

□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 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

〈회의 요약〉

○ 성 갈등에 대해서는 시민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당초 제안 내용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없다는 것에 동의

○ 따라서 시민 사회가 성 갈등 문제를 자발적으로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 I: 공감수 5천명이 넘었지만, 소송이나 재판 중인 사안을 민주주의 서울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봄.

○ A: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나 서울시가 이런 역할까지 수행해야할지 의문임.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온당한 태도라고 생각함. 시립대에서 자체적으로 공론장을 열도록 권고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현이 어렵다고 봄.

○ B: 서울시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더 의미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 G: 이번 제안에는 성 갈등 공론장을 열자는 주장이 있는데, 어떤 공론장을 열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할 건지 쟁점이 뚜렷하지 않아 보임. 무고와 관련해서는 이미 기존의 절차가 있음.

○ E: 공론장에서 서울시가 필요한 담론을 제시하는 것과, 개별 사건을 분리해서 다뤄야 할 것. 시립대 사건에 대해서는 공론화 할 사안이 없다고 생각함.

○ K: 5,0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았는데 시장이 답변했는지?

- 제안 단계에서 500명 이상 공감한 제안에 대해서 의제선정단에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 시민토론 단계에서 5,000명이 참여하면 시장님이 답변함.

○ D: 사인 간의 사건이라도 사회적 의미가 있다면 의제화 가능하지만, 이 제안은 의제화 가능한 부분이 없어 보임. 다만,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 현상이 반영되어 있음.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구체적인 쟁점의 수준으로 도출될 때, 서울시가 공론화하면 될 것.

○ H: 제안 내용 중에 '성범죄 무고 방지 및 피해자 지원과 치료, 회복프로그램'을 논의해보면 좋겠음.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보다, 무고를 당해서 삶이 망가졌다고 했을 때 사회가 책임감 있게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원 정책을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관련 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사건과 별개로 피해자 지원이나 치유회복 프로그램이 잘 활용되도록 논의되길 바람.

○ I: 현행법상 국가에서 법률로 보호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이 부분을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것.

○ G: 무고자에 대한 지원이나 상담은 현재 없을 것. 무고자들의 요구에 맞는 지원프로그램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지 궁금함.

○ H: 법적인 사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 충분히 시민들이 논의할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음.

○ E: 이 사안은 실제로 무고가 밝혀졌을 때 상황과는 다르다고 봄.

□ 탄천물재생센터 태양광 설치

〈회의 요약〉

○ 기술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사항으로 공론의 여지가 없다는 의견
○ 市 태양광 관련 정책을 해당 부서에서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G: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방향보다는 특정 지역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자는 제안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핵심적이며 공론화 대상으로 부적절함.

○ H: 공공기관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할 때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서 갈등이 생김.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직접 확인하고 실험을 해보는 것이 민주주의 서울의 목적이라고 생각함. 관련 부서가 어떤 답을 했더라도,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들의 토론을 통해 시민의 답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싶음.

○ I: 2013년도에 동일한 장소에서 태양광 발전 전문 업체에서 설치를 시도했다가 시공 여건이 안 되어서 포기한 사안인데, 그런 검증 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지 의문임. 이 사안 자체만으로는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함.

○ J: 공론화라는 것은 시민의 필요와 욕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제안의 경우 시민들의 진정한 욕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정책이 구체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면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음. 제안자의 제안 내용만 갖고 토론하기 어려울 것.

○ A: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을 시민들과 논의하면, 참여자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음. 다만, 정보 제공과 안내는 필요함.

-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에서 가용 공공 부지에서 2022년까지 태양광 100% 공급 예정. 아파트 등 100만 가구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고 실행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성과를 공유하고 있음.

○ D: 부서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시민에게 전달이 안 되고 있다면, 홍보를 더 하면 된다고 봄.

○ I: 이 제안이 정보 공개형으로 적합한지 의문이 들고, 공론화 할 때 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의문임.

○ A: 첫째, 이 제안에 대해서는 쟁점이 없어 보임. 둘째, 현재 관심 있는 시민들은 자기 아파트에 태양광 발전 전면 패널을 설치하기도 함. 서울시는 관련 지원을 잘 하고 있다고 봄. 다만, 이런 제안에 대해 적절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시의 정책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고, 이것도 공론화의 한 방식일 수 있음.

○ G: 공론화 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리자는 의견으로 이해됨. 원칙적으로는 제안자의 제안만을 놓고 공론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봄. 공론화하지 않는다면 자세하게 정보 제공한다는 건 별개의 문제로 보임.

○ E: 원칙적으로는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제안의 범위에서 공론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

○ G: 시민제안 원안을 가지고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쟁점을 의제화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강일동 9호선 연장 확정 고시 요청

〈회의 요약〉

○ 이미 진행 중인 정책 사업으로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

○ I: 서울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구상됨. 특히 교통 분야는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다시 세움. 9호선 연장은 기본계획에 없었지만, 사회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해 천천히 진행된 건으로 봄. 특정 지역의 이익에만 국한된 사안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민주주의 서울에서 어떻게 논의할지도 고민이 필요함. 또 부서 검토 결과 수용되었음에도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면 토론을 해보는 것도 긍정적임.

○ A: 교통, 건설 관련 사안은 주민투표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논의 과정과 절차를 걸쳐 결정된 경우가 많음.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오는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음. 한 시민의 제안을 부서가 수용한다, 안한다 답변하는 것보다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주는 게 필요함.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백지화와 차차 이동 플랫폼 차차를 통한 시민 이동환경 수준 개선 및 공유 경제 활성화(의제 재검토)

〈회의 요약〉

○ 갈등조정기구나 사회적대타협 같이 조정기구가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관련 사안을 공론화 할 경우 해당 기구의 역할과 조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의견

○ D: 두 건 모두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임. 시민토론을 해볼 만한 의제이지만,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사항이 뚜렷하지 않다면 다루지 않는 게 적절할 것.

○ B: 두 사안이 각각의 조정기구가 작동중이고 서울시는 권한이 없는 사안이라고 하면, 민주주의 서울이 소통 창구로서 역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지 궁금함.

- 2018년에 올라온 제안으로 공론화를 결정했고, 시민토론을 준비하던 중에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였음.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은평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유차량은 사회적대타협 기구가 생긴 상황에서 민주주의 서울에서 공론화 하는 것이 맞는지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아 안건으로 올렸음.

○ B: 두 사안 모두 현재 진행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은 해당 지역에서 의지를 갖고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시도가 바람직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 I: 제도가 바람직하게 작동한다는 의미가 다양하게 해석될 것. 주민들이 생활 주변지역에 혐오시설 등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경우 행정에서 해결하는 과정 또는 조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절차임. 또한 시와 구는 사무 영역이 구분되어 있음.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결정됐다면, 이후 절차는 구청에서 이행하는

것이고 시나 다른 기관이 간섭할 수 없음. 그런데 최근에 일각에서 진실이 아닌 것을 알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해 현재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관련 정보가 제대로 공개가 안 되어 있음. 민주주의 서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순수한 의미에서 '정보 공개'라고 생각함.

○ H: 은평구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관계자들 간의 대립이 심각한 사안으로 서울시 등 다른 주체들이 개입하면 갈등관리 자체가 어려워짐. 민주주의 서울에서 공론화하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함.

○ E: 공유차량 문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인데 한 번도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왜곡된 정보도 많음. 서울시가 인허가권이 있으니,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택시기사들의 처우에 대한 방향이 맞는가 등의 논의도 가능 할 것으로 보임.

○ 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진행 중인 사안. 지자체가 인허가권이 있다고 해도, 별도의 논의장을 여는 게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음. 인허가권이 있든 없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존중하고 맡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C: 공유차량 문제는 소관 부서인 국토부와 의회의 입법 결과를 기다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기관들이 그런 결정 내릴 때 서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

○ A: 시민 입장에서 민주주의 서울에 제안을 올릴 때, 행정력이 다양한 방법으로 권한을 행사할 것을 기대한다고 봄. 정책 설계 과정에 나의 의견이 반영되고,

권한 행사를 위한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지만 사회적 현안에 대해 공론을 만드는 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 사회적대타협이 진행 중인데 서울시가 공론화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

○ L: 4가지 정도로 오늘 논의를 정리할 수 있음. 먼저, 제안자의 제안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봤을 때, 제안자 범위 넘어서서 확장되는 것 같음. '기획'이라는 것은 또 다른 변형, 융합을 허용하는 것이니까 범위를 넓혔으면 함. 둘째, 법, 제도로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함. 셋째, 행정 업무를 하다보면 국가사무 인지 지방자치 사무인지라는 쟁점이 있음. 최근 한 사례로, 경기도에서 기본소득 공론화주제로 삼고 이야기하려고 함. 기본소득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 사무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런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기본 소득에 도비를 넣는 것이 적절하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이러한 과정은 더욱 필요함. 공무원, 기관의 의견과 다른 시민 의견을 굳이 듣는가 생각해보면, 이미 공론화 범위가 법, 제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넷째, 행정력이 투입되고, 정책화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다룰 것인가, 아니면 더 넓은 주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 이런 네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 더 유연하게 논의를 진행하면 좋겠음.

○ A: 서울시 권한 밖의 일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만약 이 범위 넘어서서 공론장을 열려면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다른 절차가 필요할 것. 우리가 의제 검토 과정에서 담당 부서 검토의견만 듣는 상황에서는 논의의 한계가 있음

○ L: 갈등관리 절차와 과정이 이미 진행되는 사안에 서울시와 같은 다른 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함.

○ E: 공감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어느 정도 사례별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함. 공유차량서비스는 관련 기업이 제안한 게 공론화 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봄. 다만 많은 분들이 갈등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지만, 차량공유서비스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대타협이 파기됐고, 사회적으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음. 그래서 민주주의 서울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라고 판단됨. 차량 공유 관련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고, 토론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함.